

↑ 코스피 2488.64 (+46.72) ↑ 코스닥 717.96 (+12.20)
 ↑ 금리 (연) 2.524 (+0.042) ↓ 환율 1465.15 (-3.25)

정의선
 “기본기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02



내우외환 독감 앓는 韓경제

탄핵 정국에 ‘대외신인도’ 위기 최상목 권한대행 리더십 시험대

최 부총리 ‘尹 체포’ 미온적 태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더 키워 외신 “경호처 방해, 사법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2·3 사태 이후 최 대행은 경제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하고,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한달간 주재해 온 비상 경제·금융 점검회의의 의미도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4일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시’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 했으나, 최 대행은 경호 인력의 방어 일시 해제명령에 대한 거부(可否)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최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는 지시를 통해 공수처 요청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자정 기준)에도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과급이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선결과제가 아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가 꺾였다는 점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려면 진행 중인 정치 혼란이 진정돼야 한다. 지난 주말 외신들은 한국 공권력이 내란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AP통신은 한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해 “경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원 명령에 따른 구금을 경호처가 막을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방해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약 200명의 군인과 경호원들로 구성된 ‘인간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달 전 자신히 했던 선언을 곧장 번복해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트렸다”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 최고법원 중 하나(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소추 심리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외환보유액 석달 만에 상승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4156억 달러로 전월말(4153억9000만 달러)보다 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10월 42억8000만 달러 감소 이후 석달 만에 상승했다. /뉴시스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혼선 경찰 “尹 체포 일임 거부 공조본 체제서 2차 집행”

영장 기한 연장 등 통해 2차 집행 막아서는 경호처 현행법 체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 시,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현행법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한 셈이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보낸 공문이었다고 한다. 해당 공문을 6일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

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재이첩 없이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받는 것은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공조본의 틀 안에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체포·수색영장 시한이 자정에 만료됐다는 점이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공수처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체포·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차 집행 때는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는 도로에 차벽을 걸고, 스크림으로 대응해 영장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120명을 투입했는데, 사전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 투입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건설 불황 악화일로... 투자 쪼그라든다

공사비 불안·PF 불확실성 지속 올 건설투자 규모 300조 밑돌 듯

〈건설투자 전망〉

/한국은행

구분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조원)	147.1	159.0	306.0	147.6	153.9	301.8	295.3
증감률 (% , 전년동기비)	1.7	1.4	1.5	0.4	-3.2	-1.4	-2.1

1)원계열, 실질(2020년 연쇄가격 기준)
 2)2024년 하반기, 2024년과 202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올해도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함께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건설투자(건설착공·공공공사·착공통계, 정부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가공해 추계되는 건설 투자액) 규모도 3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해 약 302조원 인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역성장세가 이어지면서 30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는 전년 대비 -0.7%에서 -2.1%로 기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망치를 내놓는 시점이 늦을수록 감소폭이 컸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경기는 상반기 부진하다가 하반기 들어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가 2024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건설공사비,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된 수치인 만큼 공사비 불안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건설투자 감소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년간 오르기만 했던 공사비는 높은 수준에서 아예 고착화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나 뛰었다. 최근 다소 안정됐지만 2024년 8월 기준 12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설시장 물량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건설수주는 2023년 전년 대비 16.8%나 급감했고, 2024년 1~8월까지도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정부의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상반기에는 다소 개선됐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실,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점검회의 소집...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여, 경찰 항의방문... “대통령 수사에 편향성 보이지 않아야” /사진 뉴시스

▲홍준표 “짜장면서 짜장 빼면 짜장면 되나... 내란죄 빼면 탄핵 무효”
 ▲“윤 체포 영장 집행” 두고 여야 대치 격화... “불법 영장” “최상목 탄핵”

▲헌재 “국회 측에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동북아 허브’ 무안공항, 참사 딛고 날갯짓 언제쯤